

보도시점 2023. 4. 26.(수) 조간 배포 2023. 4. 25.(화) 09:00

2022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 불법 채권추심 위협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종합적·체계적 대응 지속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대응 사례

- ①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대출을 알아보았음. 이미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용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 ②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가족·친구·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본인 계좌로 30만원을 수령하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음.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실상 변제할 금액이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원금 변제가 연체되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이 심하여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 ③ C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함. C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함.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함.
- ④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자를 갚으라'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D씨는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이용하는 채무 수가 20여 건이 되었다.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함.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형사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함.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남.

<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 ⑤ E씨는 2021년 8~9월 기간 중 수시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1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수시로 변제한 결과 16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약정이율 2,607%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제를 요구한바, E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음. 나아가 E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초과 변제한 1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 취지대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초과지급액을 반환받음.

◆ (사례3) 최고금리 위반 관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의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 ⑥ F씨는 낮은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022년 1월 초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7일 후에 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실수령액 57만원)하였고, 2022년 1~2월 중 총 96만원을 상환하였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위 상환금액은 연장이자에 해당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원금 변제를 요구하였음.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는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변제를 받겠다'는 협박을 하였음. 이에 F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신청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났음. 동시에 경찰의 수사 사실에 부담을 느낀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F씨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초과지급액을 반환함.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 | |
|---|---|
| <p>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p> <p>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p> <p>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p> <p>④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p> <p>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p> | <p>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p> <p>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p> <p>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p> <p>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p> <p>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p> |
|---|---|

2020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시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20.8월)하고, 대리인 선임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20.8월)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왔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상 연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적극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하였다. 전체 지원 4,510건 중에서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및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였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하고 있어(3.27~4.14, 2,928건) 금년도 신청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문희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구은정 (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	책임자	국 장	이명규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이진아 (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백영종 (054-810-1061)
		담당자	팀 장	조동규 (054-810-1062)

1 2022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금융감독원)

▣ '22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1,238명이 4,625건(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 (신청 현황) '22년 중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38명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
- 신청자가 전년(1,200명) 대비 증가(+3.2%)하였고,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1,127명, 91%)에 해당하는 등 더 많은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채무자대리인 신청 현황

(단위: 명, 건, %)

구 분	2020	2021	2022(B)	증감 (증감률)
신청자	632	1,200	1,238	38 (+ 3.2%)
채무건수	1,429	5,611	4,625	△986 (△17.6%)
1인당 신청(채무)건수	2.26	4.68	3.74	△0.94 (△20.1%)

- (채무 건수별)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 45.8%) 대비 비중이 1.1%p 감소
-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으로 전년(242명, 20.1%) 대비 3.9%p 감소

채무건수별 신청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2020		2021		2022		증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건	434	68.7%	651	54.3%	684	55.3%	+33	+1.0%p
2~5건	148	23.4%	307	25.6%	353	28.5%	+46	+2.9%p
6~10건	28	4.4%	113	9.4%	109	8.8%	△4	△0.6%p
11~30건	20	3.2%	104	8.7%	76	6.1%	△28	△2.5%p
31건 이상	2	0.3%	25	2.1%	16	1.3%	△9	△0.8%p
계	632	-	1,200	-	1,238	-	+38	-

□ (업자·유형별)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

-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98.6%)을 차지

업자 종류별 신청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		2021		2022		증감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미등록대부업자	1,348	94.3%	5,484	97.7%	4,555	98.5%	△929	△16.9%
등록대부업자	81	5.7%	127	2.3%	70	1.5%	△57	△44.9%
계	1,429	-	5,611	-	4,625	-	△986	△17.6%

피해 유형별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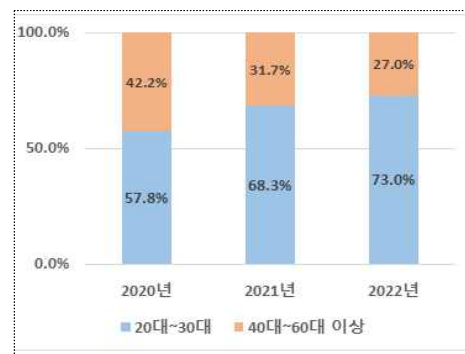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20		2021		2022		증감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증감률
최고금리 초과	105	7.3%	17	0.3%	-	-	△17	△100%
불법 채권추심	353	24.7%	85	1.5%	67	1.4%	△18	△21.2%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971	67.9%	5,509	98.2%	4,558	98.6%	△951	△17.3%
합 계	1,429	-	5,611	-	4,625	-	△986	-

□ (연령대별)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482명, 38.9%)을 차지하였으며, 전년(30.4%) 대비 비중도 증가(+8.5%p)

-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년 이후 꾸준히 증가(57.8%→68.3%→73.0%)한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 감소(42.2%→31.7%→27.0%)

연령대별 신청비중 추이



연령대별 신청 현황

(단위: 명, %, %p)

구 분	2020		2021		2022		증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대	146	23.1%	365	30.4%	482	38.9%	+117	+8.5%p
30대	219	34.7%	455	37.9%	422	34.1%	△33	△3.8%p
40대	184	29.1%	269	22.4%	234	18.9%	△35	△3.5%p
50대	63	10.0%	75	6.3%	76	6.1%	+1	△0.1%p
60대 이상	20	3.2%	36	3.0%	24	1.9%	△12	△1.1%p
계	632	-	1,200	-	1,238	-	+38	-

□ **(지역별)** 신청자 중 603명(48.7%)이 수도권
(서울 181명<14.6%>, 경기 333명<26.9%>, 인천 89명
<7.2%>) 거주자로, 비중은 전년(49.2%) 대비
0.5%p 하락

- 그밖에 635명(51.3%)은 경상(301명, 24.3%),
충청(158명, 12.8%) 등 비수도권 거주자에 해당

지역별 신청자 현황('22년)



지역별 신청 현황

(단위: 명, %, %p)

구 분	2020		2021(A)		2022(B)		증감(B-A)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경 기	177	28.0%	311	25.9%	333	26.9%	+22	+1.0%p
서 울	93	14.7%	188	15.7%	181	14.6%	△7	△1.0%p
인 천	48	7.6%	91	7.6%	89	7.2%	△2	△0.4%p
수도권 계	318	50.3%	590	49.2%	603	48.7%	+13	△0.5%p
경 상	164	25.9%	283	23.6%	301	24.3%	+18	+0.7%p
충 청	68	10.8%	149	12.4%	158	12.8%	+9	+0.3%p
전 라	55	8.7%	125	10.4%	116	9.4%	△9	△1.0%p
강 원	14	2.2%	34	2.8%	41	3.3%	+7	+0.5%p
제 주	13	2.1%	19	1.6%	19	1.5%	-	-
비수도권 계	314	49.7%	610	50.8%	635	51.3%	+25	+0.5%p
총계	632	-	1,200	-	1,238	-	+38	

□ **(수사 의뢰 현황)** 신청자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희망
하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355건을 수사기관(경찰 등)에 수사 의뢰

수사의뢰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	2021(A)	2022(B)	증감(B-A)	(증감률)
수사의뢰	45	613	355	△258	(△42.1)

2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 '22년 중 채무자대리인(4,473건), 소송대리(28건), 소송전구조(화해 등/9건) 등 4,510건을 무료로 지원

□ '22년 중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총 1,001명, 4,510건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

- 지원 인원은 '20년 346명에서 '21년 899명, '22년 1,001명으로 지속 증가, 지원 실적은 '20년 919건에서 '21년 4,841건, '22년 4,510건으로 증가
-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20년 이후 지속 증가(73.4%→85.6%→86.3%)하여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정착단계에 진입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단위: 명, 건, %)

구 분	2020	2021	2022	증감 (증감률)
지원 인원	346	899	1,001	102 (+11.3%)
신청건수*(a)	1,252	5,657	5,225	△432 (△7.6%)
지원건수(b)	919	4,841	4,510	△331 (△6.8%)
지원비율(b/a)	73.4	85.6	86.3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접수(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채무자대리인 등 분기별 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020. 1Q	6	2021. 1Q	874	2022. 1Q	687
2020. 2Q	72	2021. 2Q	1,621	2022. 2Q	1,222
2020. 3Q	193	2021. 3Q	1,427	2022. 3Q	1,357
2020. 4Q	648	2021. 4Q	919	2020. 4Q	1,244
합계	919	합계	4,841	합계	4,510

□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

3 향후계획

□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

①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채추심행위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

② 보다 많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 강화

③ 제도 시행 이후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 강화

* [20·30대 신청인원 비율] : ('20) 57.8% → ('21) 68.3% → ('22) 73.0%

□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수사기관을 통한 특별 단속* 지속

* 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23.10월)

②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대부광고 대응체계 구축*,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정보 발령 등

* 대부협회를 통한 대부금융광고 사전심의 및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지속,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기관 범위 확대((現)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改) 현재 + 서금원장 추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③ '23년 중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지속적·안정적 공급

④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홍보·교육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②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 **(도입 경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실질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도입

○ 사업 시행('20.1.28.) 이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금감원 홈페이지 內), 지원 소득요건 완화, 대리인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등

□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을 수행

①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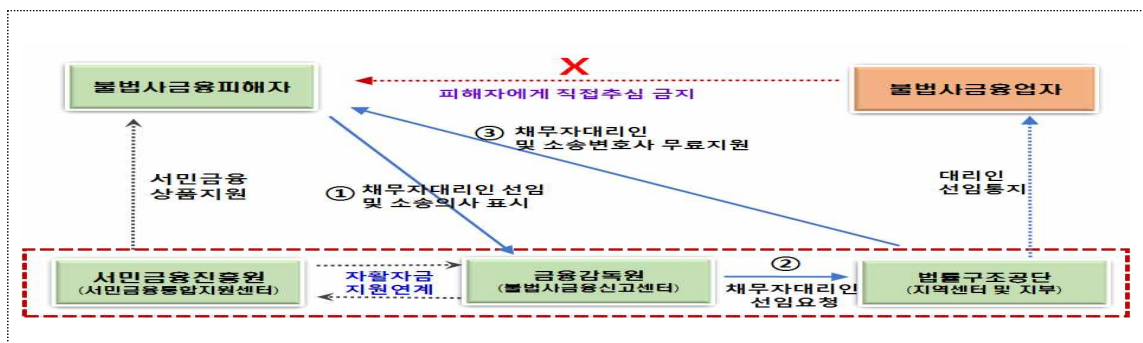
②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대리

□ **(지원 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피해자

○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月 259.7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함

◆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① 전화 신청

-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청 가능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최상단)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시 신청 화면 연결

[참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신청 화면

불법금융신고센터	
투기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자주에 대한 대출로서 위법·부당행위와 의심되는 대출(LTV 등 한도규제 위반, 담보물 과대평가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위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 편위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의 불법 행위, 불법 상호의 사용, 기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 전용제보	

③ 오프라인 신청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민원상담센터)
-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① 대출 수요 발생시

- ①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

- ②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참고] 파인*(Fine.fss.or.kr) 메인 화면 중 ‘정책서민금융’ 등 확인 방법

* ‘fine.fss.or.kr’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파인’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파인' (Fine) portal.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홈영상상', '파인 서비스 소개', '인기랭킹 순위', and '내 보험 다보여'.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right.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공통 (Common):** Includes links for '잠자는내돈찾기', '금융상품 한눈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융상품약관조회', '내 계좌한눈에', '채권자변동조회', '신용정보조회', and '신용상담'.
- 금융꿀팁 (Financial Tips):** Includes links for '금융꿀팁 200선', '영상뉴스 파인톡톡', '금융자문서비스', '금융거래계산기', and '금융용어사전'.
- 은행·카드 (Bank/Credit Card):** Includes links for '자동이체통합관리', '카드포인트조회', and '와환갈잡이'.
- 보험·증권 (Insurance/Securities):** Includes links for '내보험다보여', '보험찾아줌', '보험다모아', '펀드다모아', 'ISA다모아', '전자공시(DART)', '자동차보험포털', '장애인보험', and 'e-클린보험서비스'.
-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Key Information by Financial Product Transaction Stage):** A central section with icons for '예·적금', '대출', '보험', and '펀드'.
- 통합연금포털 (Integrated Pension Portal):** Includes links for '연금저축비교공시', '퇴직연금비교공시', '원리금보장연금상품', and '퇴직연금맞춤형수수료비교'.
- 서민·중소기업 (Small Business/Individual):** Includes links for '서민금융1332', '중소기업·자영업자금융지원', '전·월세자금안내',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 '핀테크한정자문서비스', and '중소기업직접금융종합지원'.
-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Includes links for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지킴이', '전국민신용교육', '금융교육센터',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안내', and '금융상품비교공시(금융합회)'.
- 금융회사 (Financial Institution):** Includes links for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and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현황'.

On the left side, there are sections for '금융소비자 뉴스', '생생금융인포', and '금융권 채용정보'. At the bottom, there is a section for '알림창' (Notification Window) with a link to '바로가기' (Go).

② 대출계약시

- ③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21. 7. 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적용 ('21. 7. 7. 이전에는 연 24%)

-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참고]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 ☑ **사 례**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
- 원금 : 80만원
 - 이자 : 20만원 (= 1개월 후 지급한 100만원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1개월 이자율 : 25% (= 20만원/80만원×100)
 - 연 이자율 : 300% (= 1개월 이자율×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③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 ④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